

정책연구 2009-2



국가장학사업에 있어 대학의 책무성 연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한 유 경

공동연구자 | 박 정 수
오 범 호

연구조원 | 이 윤 희
양 영 은

정책연구 2009-2

국가장학사업에 있어 대학의 책무성 연계방안 연구

(Improving the Accountabil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for the Income contingent Loans in Korea)

연구 기관 : 한국장학재단

연구 책임자 : 한 유 경

2010 년 3 월 31 일

한국장학재단

제 출 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인 “국가장학사업에 있어 대학의
책무성 연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년 3 월 31 일

- 연구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연구기간 : 2009.8 - 2010.2
- 연구책임자 : 한 유 경
- 공동연구원 : 박 정 수
- 공동연구원 : 오 범 호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장
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과 함께 제기되는 예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국가장학사업의 현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배경과 예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책무 및 역할 제안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둘째, 대학의 책무성 유형을 탐색하고, 국가장학사업에 있어 대학의 책무성을 고찰하였다. 셋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책무 및 역할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현장 실무자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의 책무성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책무성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더욱 현실적이고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론적, 학술적 성격을 띤 연구 방법보다는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타 분야의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이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장학사업은 유형에 따라 크게 무상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학자금 대출은 2005년 도입 이래 점차 무상장학금의 비율이 축소되고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학교육의 기회형평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요구, 국가장학사업의 효율성 제고 요구,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근거한 고등교육문화 정립에 대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의 유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제안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금의 상환시점을 취업(소득발생)시점 이후로 두는 것으로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의 보완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등록금의 과도 인상, 막대한 재원조달 및 안정적인 상황을 확보가 주요 문제점이자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학은 제도의 간접적인 수혜자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해야 함이 제기되는 바이다.

국가장학사업에 있어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 연구한 결과, 대학의 책무성은 ‘대학이 국가·사회의 일부로서 대학이 교육·연구·봉사 등 그 본질적인 기능을 통하여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신정철 외, 2007)’. 국가장학사업에 있어 대학의 책무성은 누구에 대해 책무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책무성과 수요자에 대한 책무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학은 국가장학사업의 수혜자로서, 국가로부터 인재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의 이행당사자로서, 대학은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책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한편 수요자에 대해서는 고객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국가장학사업에 있어 대학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제도의 중심에 있는 대학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자금 지원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인 회수에 있어서도 이미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이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주로 장학 사업을 연계하는 기관들이 큰 역할을 하며, 대학은 국가와 이들 기관에 의해 제도를 뒷받침하는 데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격려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는 정부에서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한 후 대학을 통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 회수를 위한 교육, 졸업 후 취업 연계 등 대학 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있어 대학의 역

합과 책무성 연계방향을 설정하였다.

대학이 수행해야 할 책무의 내용은 대출의 상환율 확보와 대학재무의 합리화로 설정한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학별로 대출 상환율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졸업자의 취업률 제고, 엄격한 학사관리, 적정 등록금 수준 유지, 교내 장학금의 확충, 재무구조 투명화, 대출자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등에 대해 대학이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책무를 부여하는 방법적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대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시장적 요구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책무를 다하는 구조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후에 공시항목으로 중심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율을 대학별 대출규모에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책방향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시행초기 약 2년간으로 대학이 '대학별 상환율, 취업률, 학사관리 현황, 등록금 현황, 교내장학금 현황, 재무구조 현황, 금융교육 현황'등을 공시하고, 대학알리미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일종의 신호등체제로 제공하는 단계이다. 수요자들은 이 정보를 고려하여 진학할 대학 혹은 대출제도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 질 개선 노력, 대출관련 교육 및 상환율 제고 노력이 가능할 수 있다. 2단계는 2012년부터 약 2년간으로 이 단계에서는 대출 상환율을 주요 지표로 하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대상을 제한한다. 1단계에서는 공시항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자율적 책무를 유도하였다면, 2단계는 비교적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 공시대상으로 설정되었던 항목들은 궁극적으로 상환율 제고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 대학을 제한하는 기준은 대학별 상환율로 한다. 대출 상환율이 우수하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대상으로 인 증받은 대학에 한정하여 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대출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대학별 상환 실적을 주요지표로 활용한다.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로 취업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지표는 취업의 질도 나타내주는 보다 신뢰성 높은 지표라는 점에서 현재의 취업률 지표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등록금 인상, 학점인플레이션,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 등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려되는 개별 문제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방안 역시 위의 정책방향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등록금 인상 수준, 학사관리 수준, 대학의 금융교육 수준 등을 1단계에서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의 하나로서 제안하여, 대학이 자율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과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개별대학이 이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대학에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무성을 안겨주기보다 정부와 대학이 협력관계를 맺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